

중소기업 정책적 지원 강화 나선다

전북도, '선도기업·도약기업·돋움기업 육성사업' 지원체계 개선해 기업 경제적 부담 완화

전북도는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 및 장기화로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경제위기 우려에 도내 제조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대응 대책으로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의 3대 핵심 사업인 전라북도 선도기업·도약기업·돋움기업 육성사업의 지원체계를 한시적으로 개선하여 선제적 지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는 (1단계)돋움기업→(2단계)도약기업→(3단계)선도기업→(4단계)스타기업→(5단계)글로벌강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사다리 육성사업의 세부사업 신청요건 완화 및 기업부담 현금 매칭 비율 축소이다. 이는 유동비율/부채비율 제한조건 완화를 통해 기업 초기 정상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수행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부담 현금 매칭 비율 축소를 통해 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하여 자금 압박을 받는 힘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기존에 세부사업 신청시 유동비율·부채비율 조건이 각각 유동비율은 50% 이상, 부채비율은 500% 이하에서, 이번 사업 개선으로 유동비율 30% 이상, 부채비율 1,000% 이하로 완화를 시켰다.

또한, 기술개발역량강화(R&D)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기존 총사업비

의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현장으로 기술해결지원, 마케팅지원 등 비R&D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 또한 10~20% 하향 조정된다.

둘째, 기업의 연구소 유지를 위한 인건비 지원 범위 확대이다. 기업의 매출감소,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기업의 고용인력 조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기업의 연구인력 고용 유지를 지원한다. 기술개발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지원한도액도 당초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확대 시켰고,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한해 인건비 지원이 가능했던 것이 신규 및 기존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셋째, 기업지원사업 지원금 선지급 및 사업 추진기간 연장이다. 지원금

선지급은 기업 현금흐름의 병목현상을 방지하고, 신속한 성과창출의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현장 애로기술 해결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기업지원 사업비 지급 방식은 후지급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으로 전환, 사업당 추진기간을 당초 3~6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하여 기업 부담완화와 과제 성공률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런 전북도 성장사다리기업 육성사업 개선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경보 단계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내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참여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부안·김제 딸기, 홍콩 본격 수출길 올라

전북 스마트팜 생산단지 딸기 월 2톤 물량 수출

전북도 부안과 김제에서 생산된 딸기가 홍콩으로의 본격 수출길에 올랐다.

도는 부안과 김제에 소재한 스마트팜 생산단지에서 지난 2월부터 약 1톤의 설향 딸기를 홍콩에 시범 수출해 홍콩 현지 소비자의 호응에 따라 25일부터 월 2톤 정도의 물량을 수출해 전북도 딸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부안·김제 딸기의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꾸준한 선별·포장 조건 등의 협의와 시범 수출의 결실로, 안전한 한국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홍콩 소비자의 식탁에서 앞으로 전북 딸기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서는 그간 이번에 수출하는

부안과 김제 스마트팜 생산단지에 무인 방제 및 ICT융복합 시설 등을 지원해 겨울 작기에 한해 수출 하였던 딸기를 연중 생산 납품이 가능한 체계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바이어들의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농산물 수출 전략품목 발굴·육성을 위해 기간 제2의 파프리카를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2016년부터 딸기, 배, 토마토, 멜론, 밤, 고구마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로서, 2020년부터는 농협 전북지역본부와 함께 도 광역 차원의 수출 효과 품목 발굴·육성을 위해 사과, 복숭아, 수박을 추가해 예산증액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과 공동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요양병원 집단감염 예방 위한 방역관리 강화

최근 대구·경북 등에서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북도가 도내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하던 도내 요양병원 80곳에 대한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행정명령(보건복지부장관)을 가동하고 지난 23일부터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점검은 ▲병원 내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매일 종사자 및 기관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기침 등 임상증상 기록관리 ▲의심증상자는 즉각 업무배제 ▲외부인 출입제한 ▲환자 대면 또는 입원실 출입시 마스크 착용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 유지 등 관리 강화 ▲종사자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준하는 수칙 준수 등 실질적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의료기관 관리다.

전북도는 요양병원이 행정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강력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3월에는 요양병원 80곳에 대하여 중국 등 여행 이력 종사자 업무배제, 면회객 제한, 원인불명 폐렴환자 여부 등을 전수 조사 한바 있으며, 원인불명 폐렴으로 치료 중인 환자 105명에 대해서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SNS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도, '국책사업 발굴 포럼' 분과별 본격 활동 돌입

전북도는 융복합사업·스마트기술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신개념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도 실국 및 전북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책사업 발굴 포럼'이 분과별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분과별로 국책사업 발굴 포럼 운영계획에 근거해 포럼위원 구성 및 로드맵을 수립하고 25일을 기점으로 10월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2022년 이후 국가예산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20건 이상을 목표로 발굴할 계획이다.

발굴 사업은 국가예산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대형사업 발굴 강화를 위해 1,000억 이상 10건, 500억원 이상 10건 이상으로 사업비를 구체화하여 발굴할 예정이다.

국책사업포럼은 융복합, 농업농촌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 산업경제, 환경안전 6개 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과별로 실국장이 위원장을, 전북연구원 위원과 실국 주무과장이 공동 간사를 맡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융복합시대에 걸맞는 트렌드를 반영, 단위사업별 경계를 뛰어넘어 산업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 정책기획관을 위원장으로 융복합분과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도 실국의 참여 독려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도 실무책임자로 운영 간사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매월 분과별 포럼 활동실적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발굴 아이템의 구체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포럼위원 구성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전문가를 확대하여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아이템 발굴을 시작할 예정이다.

발굴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평가, 합동간담회,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보고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농촌인력수급 선제적 대응 나서

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제한 따라 대체인력 확보 방안 등 마련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는 등 농번기 인력수급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인력공급체계 확대 등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9만4,000 농가 중에 4만7,000 농가가 주작목으로 벼를 재배하고 있고, 4~6월 집중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필요한 과수와 채소는 3만1,000농가로 33%를 점유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농협과 함께 농촌인력 공급협의체 일원으로 농촌인력증가를 담당하는 농협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를 14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해 운영토록 했다.

'농작업 대행' 사업도 작년에 확대해 취약계층 영농부담 해소를 도왔다.

'농작업 대행'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기계대사업소, 지역농협에서 농·밭을 갈아주는 경운과 육묘·이앙·수확·방제 등을 고품농, 부녀농, 신규귀농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다.

임순남 고령·영세농을 위한 농기계 작업단도 2019년 201ha의 농기계 작업을 대행했고 앞으로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3월에는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위해 13개국 언어로 번역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시군 읍

면동을 통해 배포하고, 코로나19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해 농민단체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손세탁제와 마스크를 지급했다.

전북도는 부족한 인력수급을 위해 베트남, 중국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3농가에서 228명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어 이를 타개할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우선 방문, 관광(F-1)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도내 체류 외국인 2,322명에게 일시나마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류목적의 활동허가를 허용토록 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E-9) 외국인 8,933명에게도 농업분야로 전환해 취업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제언했다.

국내 인력은 농가가 시군과 농협(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에 신청하고, 외국인 인력은 시군에 신청하고 법무부에서 배정받는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신재보험만 가입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영세한 개별농가에 수급되는 계절근로자의 건강보험을 시군이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건의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